

“공직선거법 개정, 지역대표성 보장을”

박용근 도의원, 현재 ‘선거법 제22조 제1항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에 법 개정 촉구
“인구비례 원칙에만 치우쳐 지방자치 가치 충분히 반영 못해… 자치 근간 약화 우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10일 열린 전북자치도의회 제42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최근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일부에 대해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해 지역대표성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먼저 박 의원은 “현재의 판결은 모든 유권자의 한 표가 동일한 가치를 지녀야 한다는 평등선거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면서도 “현재의 결정이 인구비례 원칙에만 치



우쳐 지방자치와 지역대표성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은 지방의 대표성과 자치의 근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현재 농산어촌 지역은 행정구역은 그대로이지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다. 이 지역들은 면적이 넓고 교통 접근성이 낮으며, 생활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따라서 단순히 인구비례 원칙만을 적용할 경우, 생활권과 행정수요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워지는 건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사실을 강조하며, 박 의원은 “농산어촌 지역의 대표성은 단순한 인구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

지고 있는바, ‘표의 등가성’만을 강조한 획정은 오히려 지역소멸을 가속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간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역시 인구비례의 원칙이 중요하지만, 인구가 적은 지역의 대표성 보장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면서 “국회는 당장 현재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지역대표성과 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구 외에도 지리적 여건, 생활권, 행정구역, 교통 접근성, 지역대표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전북혁신이 여는 국민주권’ 더민주전북혁신회의 3기 출범

더민주전북혁신회의(상임대표 조지훈, 공동대표 황진·김용만·강충상·여석경·박지일)가 지난 8일 오후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하림미션홀에서 ‘3기 출범식 및 천만결을 민생을 듣다’ 행사를 열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이날 행사는 ‘전북혁신이 여는 국민주권시대’를 슬로건으로, 전북지역 14개 시·군의 혁신위원회와 지역 인사,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가 지난 8일 오후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하림미션홀에서 ‘3기 출범식 및 천만결을 민생을 듣다’ 행사를 열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사진=더민주전북혁신회의 제공)

도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

“전북특별법 개정, 연내 통과 등 성과 내야”

하계올림픽 유치 내실화·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책임있는 협력행정 등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5명이 10일 열린 제42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이어갔다.

▲김명지 의원 “메가이벤트에 밀린 특별법 개정, 연내 통과 등 성과 내야”

먼저, 김명지 의원(전주11)은 1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전주-원주 통합 등 메가이벤트에 밀려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특별법 개정에도 도정의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 근거로 재정 특례 진행 상황을 들었는데, 김명지 의원에 따르면 당초 전북이 목표로 한 교부세 또는 지방세 특례는 고사하고 현행 법령에 명시된 균특회계 별도 계정 설치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지난 제정안부터 1차 개정까지 제안된 재정 특례 관련 조항은 40% 수준의 입법 성과를 보이는 데 그쳤다.

▲김성수 의원 “전북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보다 내실 다져야”

김성수 의원(고창1)이 현재 전북 전주 하계올림픽 추진 방식이 홍보 중심 행정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북자치도가 추진 중인 사전 타당성 용역이 지연되면서 도의회 의결, 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

부 승인 등 필수 절차가 늦어지고 있어 “이대로라면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술지 의원,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책임 있는 협력 행정 촉구

김술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이하 리더센터)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북도의 책임 있고 실질적인 협력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5분 발언과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리더센터를 국제교육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고 도지사와 교육감 모두 협력 의지를 표명했으나, 교육감의 부재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 속에 도교육청 내부 분위기가 ‘부정의 자세와 소극적 대응’으로 변화했으며, 도청은 이런 현실을 인지하고도 문제 해결을 위한 행004재정적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고 질타했다.

▲윤수봉 의원, “청년이 떠나면 전북의 미래도 사라진다”

윤수봉 의원(전주1)은 ‘청년정

주·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균형 발전 대책 마련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윤수봉 의원은 청년이 머무르고 돌아오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 △청년정책 청년장주 종합계획 수립 △청년정책 전담기구 및 권역별 청년정책 주센터 설치 △청년주거 안정화 및 생활 인프라 확충 △권역형 지역균형발전기금 조성 및 인구연계형 예산제 도입이라는 4대 실천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윤 의원은 “청년이 떠나면 지역의 미래도 사라진다”며, “이제는 정책의 양보다 정책의 연결력과 체감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용태 의원, “진안군의료원, 도비 지원 법제화해야”

전용태 의원(진안)은 “진안군의료원은 동부산악권 주민의 생명안전망이자 지역 존속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시설임에도, 현행 제도시상 구조적 불평등에 놓여 존폐 위기를 겪고 있다”며 도 차원의 실질적 지원과 공약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2부는 황명선 최고위원의 기조발제로 문을 열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국민주권 정부 성공을 위한 풀뿌리 정치의 역할’을 주제로 ‘지방자치와 주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황명선·박지일 최고위원이 함께한 ‘타운홀 미팅’이 진행돼, 실시간 질문과 사전 접수된 현안 질의에 최고위원단이 직접 답변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균형발전, 농촌 소멸 위기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제기하며 현장 소통의 장을 이어갔다.

행사 말미에는 참가자 전원이 “전북혁신, 국민주권!” 구호를 외치며 3기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는 향후 ‘천만결을 민생을 듣다’ 프로젝트를 통해 도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정책화 과정을 거쳐 중앙당과 공유할 계획이다.

군산시의회 정례회 개최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25년도 제279회 제2차 정례회 포문을 열고, 내달 19일까지 4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비롯해 오는 27일부터 내달 9일까지는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며 총 25건의 안건심사와 현안업무보고 및 현장방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경구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문화관광홍보 전광판 설치 심의 △환경정책위원회 미구성 및 공동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의 전문성 공백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재무 현황 및 운영상 문제점 △계약심사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 관련 재논의 도입할공고의 100억 이하 공사의 물량내역서 미제공 시정조치 등과 관련해 군산시장에게 질의했다.

김우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차세대 에너지 산업의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에 주목하고 있으며 군산시가 이 사업을 위한 최적지라고 밝혔다.

도의회, 핵융합 새만금 부지 지정 촉구 건의안 등 채택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10일 열린 제423회 정례회 본회의서 의원 발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먼저, 김동구 의원(군산2)은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새만금 부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동구 의원은 “새만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에너지 자립과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융합 기술 실증단지 최적 입지”라며, “핵융합 기술은 탄소중립 실현과 국가 에너지 자립을 제고 위한 미래 전력산업의 핵심기술이다”고 밝혔다.

영영선 의원(정읍2)은 심각한 경영 위기에 몰린 지방의료원의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가 경영정상화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염 의원은 “지역 공공의료 체계 핵심 근간인 지방의료원의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하면서 지역 건강안전망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북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

민주 전북자치도당, 농업인의 날 맞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윤준병)이 제30회 농업인의 날(11월 11일)을 맞아 축하 메시지와 함께 전북 농업 발전을 위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도당은 1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전북 농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며 “농업인의 안정된 삶과 청년 농업인의 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현재 농어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입법·예산 활동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기간 연장을 비롯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 △농업인력 공공성 강화 △농업 정책 자금 관리·감독 강화 △농산물 재배조정 시 경제적 인센티브 지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도당은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당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농정대전환 정책을 전북 발전의 중요한 기회로 평가했다. 정부는 농가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적불채 확대, 농산물 가격안정제, 재해국가책임제, 탄소중립직불제 등을 추진 중이며, 더 나아가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스마트농업 고도화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K-푸드 수출 확대 △농촌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유통 혁신 등을 통해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준병 위원장은 “전북이 명실상부한 농생명 수도로 자리 잡도록 도당과 도내 14개 시·군이 더욱 굳건히 협력하겠다”며 “농업을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재정립하는데 전북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도당은 마지막으로 전북 농업인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전북 농업인은 단순한 생산자를 넘어 대한민국 식량안보의 최후 보루이자 국가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며 “농업인의 안정된 삶을 지키고, 미래세대인 청년농업인이 전북에서 새로운 농업의 꿈을 실현하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소방공무원 특별공진제 확대를”

김희수 도의원 “위험 직무 수행으로 헌신… 사기 진작 필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10일 열린 도의회 제42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전북소방본부 소방공무원 특별승급, 특별승진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은 화재, 구조, 구급 활동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지금도 다양한 재난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위험 직무 수행으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보상은 특별승진(이하 특진)제도라며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먼저 “현재 이종석 시스템에 의한 소방공무원 인사권한의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0조에 시·도지사에게도 특별승진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소방청장에게 인사권이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부여된 시·도 소방본부장의 인사권이 제대로 행사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지역지원시설세, 담배소비세 등 인건비의 90%를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어 지자체의 예산 여력이 부족할 경우 소방본부에 부여된 특진·사용권과 ‘추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특진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예산 중 국비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타 시·도 중 대구소방본부의 경우 최근 5년간 33건의 자체 특진 사례가 있었으며, 강원소방본부도 25건의 특진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예산확보와 지자체의 의지만 있다면 특진 대상자를 충분히 확대할 수 있다”며, “특진제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특별승급 제도 활성화도 필요하며, 관련 규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즉각적인 특별승진과 특별승급으로 보상하는 것은 그들의 공적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로 소방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특진제도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남원 지역에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해야”

이정린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이 10일 진행된 제423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공공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조속한 공공의대법 처리와 남원 지역에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을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의료 공급은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의료인이 집중되며 지역 간 의료서비스에 대한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이정린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에 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양성에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의 하나로 공공의대 설립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서남대 폐교 이후 부지매입 등 관련 절차에 대한 준비를 진행중인 남원에 우선 설치해줄 것을 촉구했다.